

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

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
기획행정실장 전요섭

목 차

- 1 FIU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
- 2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
- 3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
- 4 Q & A

목 차

1 FIU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

2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

3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

4 Q & A

금융정보분석원(FIU) 개요



금융위원회

금융정보분석원

금융정보분석원장

정보분석심의위원

기획행정실

- 기획·행정
- 법령·규정
- 국제협력
- 과태료 부과·징수
- 전산시스템 운영

제도운영과

- 금융회사등 감독·검사
- 보고제도
- 교육·홍보

심사분석실

- 심사총괄
- 배정·제공
- 국내분석
- 전략분석

심사분석1과

- 탈세정보 분석
- 요구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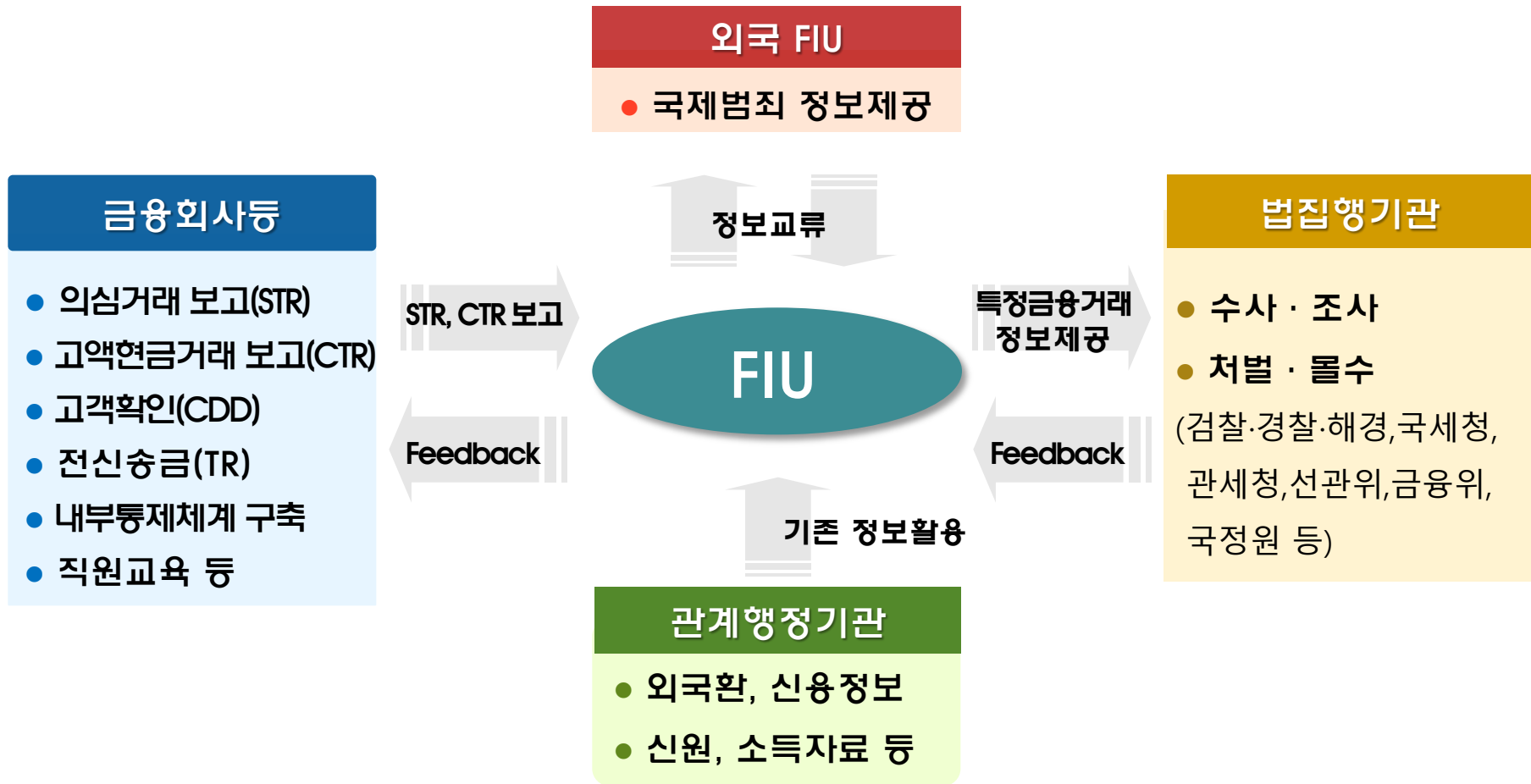
심사분석2과

- 외환범죄 분석
- 요구분석

심사분석3과

- 형사범죄 분석
- 요구분석

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



특정금융정보법 개요

- ✓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- ✓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✓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
- ✓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

자금세탁방지 주요 제도

- ◉ STR(Suspicious Transaction Report) : 의심거래 보고제도 (2001)
 -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
 - * 5천만원 (2001) → 2천만원(2004) → 1천만원(2010) → 제한없음(2013)
- ◉ CTR(Currency Transaction Report) :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(2006)
 - 원화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일률적으로 보고
 - * 5천만원(2006) → 3천만원(2008) → 2천만원(2010) → 1천만원(2019)
- ◉ CDD(Customer Due Diligence) : 고객확인제도 (2006)
 -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임
 -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(EDD)을 수행

목 차

1 FIU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

2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

3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

4 Q & A

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국제기준

* '89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된 AML/CFT 분야의 중추기구 (Financial Action Task Force)



◆ '19.6월, FATF는 가상자산(VA) 및 가상자산사업자(VASP)에 대한 가이드언스 발간

- ✓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허가/등록(license/registration) 의무화
- ✓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
 - 고객확인 의무(Customer Due Diligence)
 - 의심거래보고(Suspicious Transaction Report)
 -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(Travel Rule) 등

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

✓ '20.3.24일 공포, '21.3.25일 시행,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후 6개월 내 신고

가상자산사업자

● 신고의무

●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

- 고객확인, 의심거래보고,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

● 특례
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
-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
-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등 조치

목 차

- 1 FIU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
- 2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
- 3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**
- 4 Q & A

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

✓ 개정 특금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기준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

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-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
- 가상자산의 범위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
-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·기준
- 신고 관련 절차·방법

(1)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: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

개정 특정금융정보법

가상자산사업자 (개정법 제2조제1 호하목)

- 1) 가상자산을 **매도, 매수**하는 행위
- 2)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**교환**하는 행위
- 3) 가상자산을 **이전**하는 행위
- 4) 가상자산을 **보관** 또는 **관리**하는 행위
- 5) 1) 및 2)의 행위를 **중개, 알선**하거나 **대행**하는 행위
- 6) 그 밖에 **시행령**으로 정하는 행위 →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음

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

- 가상자산 거래업자
-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
-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

*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을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

(2)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: 가상자산의 범위

개정 특정금융정보법

○ 가상자산 (개정법 제2조제3호)

: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). 다만, 다음은 제외.

가. 화폐·재화·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

나.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·무형의 결과물

다.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

라. 전자등록주식 마. 전자어음

바. 전자선하증권

사.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

특금법 시행령 개정안

- 가상자산의 범위 (안 제3조제3항) : 선불카드, 모바일 상품권, 전자채권 추가 제외
- 다만, 가상자산 중 소위 '다크코인'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 금지(안 제13조)

(3)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: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

개정 특정금융정보법

-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**실명확인 입출금 계정**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
(개정법 제7조제3항제2호)

특금법 시행령 개정안
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을 구체화 (안 제12조의8)**
 -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)에 따라 **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**할 것
 -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)에 따른 **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**을 획득할 것
 -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**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**
 - 영 제13조제1호에 따라 **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**할 것
 -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, 분석, 평가**하여야 함

✓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*을 규정할 예정

* (예) 법화와 가상자산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

(4)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: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대상·기준

개정 특정금융정보법

-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(Travel Rule)가 부과 (**개정법 제6조제3항**)

특금법 시행령 개정안

- 규제 적용 시기 :
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
시점(2022.3.25일)
(**개정안 부칙**)
-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 :
1백만원 상당 이상
(**안 제11조**)
-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
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
규정 적용 (**안 제11조**)

<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 >

송신 수행자	수취 수행자	규제대상 여부	규정 방식
가상자산 사업자 A	가상자산 사업자 B	○	사업자간 정보 제공
가상자산 사업자	개인	○	사업자가 수취인 확인
개인	가상자산 사업자	△ (기술적으로 수취제한 불가, STR 여부 판단 필요)	사업자가 고객에게 송신인 정보 요청
개인	개인	X	-

(5)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: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·방법 등

개정 특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

-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·변경신고 (개정법 제7조제1항·제2항, 시행령안 제12조)
-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(개정법 제7조제3항, 시행령안 제12조의2)
- 신고의 직권말소 (개정법 제7조제4항, 시행령안 제12조의3)
-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정지 (개정법 제7조제5항, 시행령안 제12조의4)
-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 (개정법 제7조제6항, 시행령안 제12조의5)

✓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향후
“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”을 배포할 예정

목 차

- 1 FIU 및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
- 2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
- 3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
- 4 Q & A**

Q1.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지?

-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, 제도화*는 아님

* 설립 인허가, 자본금 규제, 영업행위 규제, 투자자 보호 등

Q2.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?

- 가상자산의 매매·교환·이전·보관·중개 등을 업(業)으로 하는 자로서
 - 가상자산 거래업자,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,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

* 다만, 개인간거래(P2P) 플랫폼,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,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

Q3.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시 금융회사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?

- 이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
 - 금융회사가 고객(사업자)과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, 분석하도록 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(법 제5조)를 재확인한 것임

Q4.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 제한한 이유는?

-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우수한 은행업권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,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

Q5.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제외 대상은?

-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과 법화(法貨)간의 교환이 없어 예치금 등이 없는 경우 발급 제외

Q6. 현금거래가 없는 사업자는 법 적용 면제를 요구하는데?

-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은 면제할 예정.
다만,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신고, 자금세탁방지 의무, ISMS 획득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함

Q7.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?

- 정부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, 특금법 시행과 관련하여 **적극적인 홍보**를 통해 **시장에서 미리 대응**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

Q8. 가상자산·블록체인·ICO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은?

-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,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
-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·육성
- ICO(Initial Coin Offering)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입장을 유지함

Thank You